

## 2. 정보 간 관계 - 대립코드 · 비교지점

앞에서 우리는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납득하고 정리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그 키워드들 간의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의 지문에서 여러 가지의 키워드나 개념들이 등장한다면 그 개념들 사이에는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이 잡힙니다. 그럼 우리는 그 정보들에 무조건적으로 주목해줘야 해요. 특히 차이점에 더욱 주목해야하는데, 이렇게 키워드나 개념들 사이에서 등장하는 차이점을 '대립코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키워드들 사이의 대립코드만 짚고 넘어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공통점 · 차이점이 바로 한 문장 혹은 짧은 간격으로 연달아 등장한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 정보들이 연달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지문에서 다루는 정보들을 기억하고, 공통점 · 차이점이 등장할 때 그 내용을 떠올리면서 정확히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어? A는 이랬는데 B는 또 다르네?' 혹은 'A도 그랬는데 B도 이렇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머릿속에 그 정보들이 잘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키워드나 개념들이 정확히 '어떤 기준'에 따라 같고 다르지 그 '비교지점'을 명확히 잡아줘야 합니다. 대립코드와 연결해보자면, 각 정보들 사이의 대립코드가 드러날 때, 그 대립코드를 명확히 정리해줄 수 있는 '비교지점'을 잡는 것이죠.

역시나 예시와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밀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봤던 지문이죠? 이항대립적 키워드를 잡는 건 앞에서 익히셨을 테니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립코드와 비교지점을 잡는 것을 익혀야 합니다 일단 준칙주의 먼저 볼게요. 준칙주의는 통화 정책을 운용할 때, 정해진 '준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네요. 그런데 '재량주의'는 어떤가요? 준칙을 무조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상황에 따라 준칙을 어겨도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준칙 준수'라는 비교지점에서 두 입장의 대립코드가 드러나죠? '무조건 지켜야 한다 VS 때에 따라 안 지켜도 된다'와 같아요. 이 비교지점을 잡고 둘의 대립코드를 정리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자세히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 글을 날려 읽는 학생들 중에서 가끔 차이점을 잡을 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도 준칙주의와 재량주의의 대립코드를 잡을 때, 재량주의의 입장을 '준칙 경시'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재량주의도 준칙 자체를 지키자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준칙에 대한 복종 그 자체는 공통적이지만, '무조건'이나 '필요에 따라'이냐라는 정도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앞에서 '준칙 준수'라는 비교지점을 바탕으로 대립코드를 잡을 때도 '때에 따라' 안 지켜도 된다고 했지, '준칙 = 가치 X' 이렇게 극단적으로

잡지는 않았어요. 차이점을 잡을 때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주의하셔야 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 키워드나 개념들이 나왔을 때 각 정보들 간 공통점·차이점이 나타난다면 꼭 비교지점을 잡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드러나는 대립코드까지 체크해주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 2016 PSAT 11번 - 대립코드 · 비교지점

규범 체계, 과학 지식, 기술적 성과와 같은 요소를 생각했을 때 이러한 측면에서 원시문화를 살펴보면, 현대의 문화와 동일한 종류는 아니지만, 같은 기준선상에서의 평가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원시부족은 고도로 발달된 규범 체계를 갖고 있었다. 헌법으로 규정된 국가조직과 관습으로 규정된 부족조직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원시인들 또한 국가를 형성하기도 했다. 또한 원시인들의 법은 단순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교한 현대의 법체계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강제력을 지니고 있었다

1. 원시문화와 현대문화 사이의 대립코드를 찾고 비교지점 통해 이해해보자.

→

2. 3번째 줄에서 원시부족이 '고도로 발달된 규범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했지만 마지막 문장에서는 '단순한 체계'라고 한다. 전자와 후자의 키워딩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무엇인가?

→

## 2017 PSAT 언어논리 24번 변형

동아시아 삼국에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장기 거주함에 따라 생활의 편의와 교통통신을 위한 근대적 편의시설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이른바 문명의 이기로 불린 전신, 우편, 신문, 전차, 기차 등이 그것이다. 민간인을 독자로 하는 신문은 개항 이후 새롭게 나타난 신문물 가운데 하나이다. 신문(新聞) 혹은 신보(新報)라는 이름부터가 그렇다. 물론 그 전에도 정부 차원에서 관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관보가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신문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4. '신문'과 '관보'의 가장 두드러지는 비교지점은 무엇인가?

→

4-1. [01:05]에서 말하는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01:05]

물론 그전에도 정부 차원에서 관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관보가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신문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

5. 관보의 정의를 바탕으로 관보와 신보(신문) 사이의 심층적인 대립코드와 그 기준이 되는 비교지점을 떠올려 보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신문'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지문에서 말하는 '신문'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자.

→

## 2017 PSAT 언어논리 25번 변형

조선 후기에 들어와 아들이 없어 대를 이을 수 없는 양반들은 가계의 단절을 막기 위해 양자를 적극적으로 입양했다. 양자는 생부와 양부가 모두 생존해 있을 때 결정되기도 하지만, 양부 혹은 양부모가 모두 젊은 나이에 사망했을 때는 사후에 정해지기도 했다. 어떤 형식이든 간에 목적은 아들이 없는 집의 가계 계승이었다.

양반가에서 입양이 일단 이루어지면 양부모와 양자의 부자관계는 지속되었으며 세월이 흘러 세대가 바뀌어도 그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양이 일시적으로만 유지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하층민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호적을 보면 평민은 물론 노비층에도 양자가 존재했으며 때로는 양부와 양자의 성씨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양자의 성씨가 다른 경우는 가계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입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에 성씨가 다른 양자가 보인다면 이는 양반가가 아닌 하층민에서 노동력 확보나 노후 봉양 등을 목적으로 한 입양이었다

6. 양반의 입양과 하층민의 입양 사이의 비교지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납득하고 이해해보자.

→

## #평가원/수능 적용하기

- 2020.09 [38~41] 위치 측정 기술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지형 환경에서 위치를 측정한다. 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다.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이고,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이다.

실외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위성항법장치)나 IMU(관성측정장치)를 사용한다.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측정한다.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고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 어렵다.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 이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이다.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 단말기가 비콘 신호의 도달 거리 내로 진입하면 단말기 안의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한다. 이 신호를 이용하여 2차원 평면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Q.1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의 공통점·차이점(대립코드)를 찾고, 그 기준이 되는 비교지점을 찾아보자.

→

## 2. 정보 간 관계 - 대립코드 · 비교지점

### 2016 PSAT 언어논리 11번 변형

규범 체계, 과학 지식, 기술적 성과와 같은 요소를 생각했을 때 이러한 측면에서 원시문화를 살펴보면, 현대의 문화와 동일한 종류는 아니지만, 같은 기준선상에서의 평가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원시부족은 고도로 발달된 규범 체계를 갖고 있었다. 헌법으로 규정된 국가조직과 관습으로 규정된 부족조직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원시인들 또한 국가를 형성하기도 했다. 또한 원시인들의 법은 단순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교한 현대의 법체계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강제력을 지니고 있었다

1. 원시문화와 현대문화 사이의 대립코드를 찾고 비교지점 통해 이해해보자.

→ 둘 다 발달된 규범 체계의 '강제력'이라는 '효과'를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그 '발달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2. 3번째 줄에서 원시부족이 '고도로 발달된 규범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했지만 마지막 문장에서는 '단순한 체계'라고 한다. 전자와 후자의 키워딩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무엇인가?

→ 글의 맥락상 '발달된 규범체계'는 조직적 규범체계의 차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조직적 체계가, 헌법으로 규정된 현대의 국가와 관습으로 규정된 부족조직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뒤에서 나온 '단순한 체계'라는 키워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습으로 규정된 부족조직의 경우, 그 조직에 적용되는 법체계가 현대와 달리 구체적으로 분화되지 않는 등 '정교'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원시부족과 국가의 조직적 규범 체계는 강제력을 가지는 등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지만, 법체계의 분화 정도와 같은 '정교함'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종류와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런 구분 역시 2022 예비시행 동일론&이원론 지문에서 등장했어요.

## 2017 PSAT 언어논리 24번 변형

동아시아 삼국에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장기 거주함에 따라 생활의 편의와 교통통신을 위한 근대적 편의시설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이른바 문명의 이기로 불린 전신, 우편, 신문, 전차, 기차 등이 그것이다. 민간인을 독자로 하는 신문은 개항 이후 새롭게 나타난 신문물 가운데 하나이다. 신문(新聞) 혹은 신보(新報)라는 이름부터가 그렇다. 물론 그 전에도 정부 차원에서 관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관보가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신문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 1. '신문'과 '관보'의 가장 두드러지는 비교지점은 무엇인가?

→ 신문물이나 구문물이나의 차이가 가장 큼니다. 신문물로서의 신문(신보)은 '개항 이후' 새롭게 나타난 문물이니까요. 단어 뜯기로 이해해도 신/문(신/보)입니다. 물론 지문에서 나온 '신문, 혹은 신보라는 이름부터가 그렇다'라는 문장에서도 단어 뜯기 그 자체를 통해 납득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새 新(신)자를 사용했다 점도 같이 볼 만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문을 읽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단어 뜯기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부연해봤습니다..

#### 1-1. [01:05]에서 말하는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01:05]

물론 그전에도 정부 차원에서 관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관보가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신문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 관보와 대비되는 신문물로서의 신문을 뜻합니다.

2. 관보의 정의를 바탕으로 관보와 신보(신문) 사이의 심층적인 대립코드와 그 기준이 되는 비교지점을 떠올려 보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신문'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지문에서 말하는 '신문'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자.

→ 신문은 관보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이걸 앞에서 정리했죠? 그리고 관보의 정의는 관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전보라, 관/보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의 신문은 모두에게 소식을 전하는 매체입니다. 즉,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신문은 오늘날의 신문처럼 '모두에게' 소식을 전하는 기능을 하는 매체를 가리킬 것이예요. 관보와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점 아시겠나요? 지문에서 '신문물과 구문물'이라는 대립코드 뿐만 아니라 '매체의 대상'이라는 비교지점을 바탕으로 숨어있는 대립코드까지 찾았습니다. 이 사고과정은 앞에서 짚었던 '구문물과 신문물'이라는 대립코드를 바탕으로 거칠 수 있는 겁니다. 즉, 개념 사이의 대립코드와 비교지점을 연결해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데에 필요한 태도입니다. 특히 지문을 분석하면서 공부할 땐 꼭 필요한 태도예요.

## #평가원/수능 적용하기

- 2020.09 [38~41] 위치 측정 기술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지형 환경에서 위치를 측정한다. 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다.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이고,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이다.

실외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위성항법장치)나 IMU(관성측정장치)를 사용한다.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측정한다.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고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 어렵다.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 이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이다.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 단말기가 비콘 신호의 도달 거리 내로 진입하면 단말기 안의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한다. 이 신호를 이용하여 2차원 평면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Q.1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의 공통점·차이점(대립코드)를 찾고, 그 기준이 되는 비교지점을 찾아보자.

→ 절대//위치는 위도나 경도와 같이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측정한 위치입니다. 반면 상대//위치는 말 그대로 '특정한 위치', 상대적인 위치를 기준으로 특정된 위치입니다. '기준'(비교지점이 되겠죠?)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에 따라 둘의 대립코드를 잡을 수 있습니다.

## 2021 PSAT 언어논리 (가) 4번 변형

통제되지 않는 자연재해와 지배자의 요구에 시달리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전(前)자본주의 농업사회 농민들에게,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계산의 여지는 거의 없다. 정상적인 농민이라면 큰 벌이는 되지만 모험적인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실패를 피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악조건은 농민들에게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안전 추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성향을 체득하도록 한다. 이러한 '안전 제일의 원칙'을 추구하기 위해, 농민들은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하는 종자의 다양화, 경작지의 분산화, 재배 기술개선 등 생계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술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호혜성, 피지배층이 지배층에 기대하는 관대함, 그리고 토지의 공동체적 소유 및 공동 노동 등 절박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원칙과 관련된 소작제도는 두 가지로 나뉜다. 소작인이 지주에게 납부하는 지대의 종류에는 수확량의 절반씩을 나누어 갖는 분익제와 일정액을 지대로 지불하는 정액제가 있다. 분익제에서는 수확이 없으면 소작료를 요구하지 않지만, 정액제에서는 벼 한 포기 자라지 않았어도 의무 수행을 요구한다.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흉년이 자주 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액제는 분익제에 비해 소작인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었지만 전자본주의 농업사회에서 보다 일반적인 방식은 분익제였다.

이러한 상황은 필리핀 정부가 벼 생산 분익농들을 정액 소작농으로 전환시키고자 시도한 루손 지역에서도 관찰되었다. 정부는 소작농들에게 분익제 하에서 부담하던 평균 지대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액제 지대로 제시하였다. 새로운 체제에서 소작인은 대략적으로 이전 연평균 수입의 두 배, 새로운 종자를 채택할 경우는 그 이상의 수입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체제가 제시하는 기대 수입에서의 상당한 이득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은 정액제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생계에 관련된 위험성 때문에 전환을 꺼렸다.

1. 어떤 정보에 주목하면서 읽었고, 문단 간 흐름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정리해보자.

[01]

통제되지 않는 자연재해와 지배자의 요구에 시달리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전(前)자본주의 농업사회 농민들에게,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계산의 여지는 거의 없다. 정상적인 농민이라면 큰 벌이는 되지만 모험적인 것을 시도하기 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실패를 피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악조건은 농민들에게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안전 추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성향을 체득하도록 한다. 이러한 '안전 제일의 원칙'을 추구하기 위해, 농민들은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하는 종자의 다양화, 경작지의 분산화, 재배 기술개선 등 생계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술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호혜성, 피지배층이 지배층에 기대하는 관대함, 그리고 토지의 공동체적 소유 및 공동 노동 등 절박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도 필요로 한다.

2. [01]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

2-1. 해당 키워드에 대한 주요 정보는 무엇인가?

→

3. [01:01~01:02]를 읽고 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계산의 여지가 없는지 이해해보자.

[01:01~01:02]

통제되지 않는 자연재해와 지배자의 요구에 시달리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전(前)자본주의 농업사회 농민들에게,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계산의 여지는 거의 없다. 정상적인 농민이라면 큰 벌이는 되지만 모험적인 것을 시도하기 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실패를 피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

4. [01:03]의 '악조건'을 이해하고 이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보자.

[01:03]

이와 같은 악조건은 농민들에게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안전 추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성향을 체득하도록 한다.

→

5. [01:04, 01:05]의 정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

[01:04, 01:05]

이러한 '안전 제일의 원칙'을 추구하기 위해, 농민들은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하는 종자의 다양화, 경작지의 분산화, 재배 기술개선 등 생계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술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호혜성, 피지배층이 지배층에 기대하는 관대함, 그리고 토지의 공동체적 소유 및 공동 노동 등 절박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도 필요로 한다.

→

[02]

이러한 원칙과 관련된 소작제도는 두 가지로 나뉜다. 소작인이 지주에게 납부하는 지대의 종류에는 수확량의 절반씩을 나누어 갖는 분익제와 일정액을 지대로 지불하는 정액제가 있다. 분익제에서는 수확이 없으면 소작료를 요구하지 않지만, 정액제에서는 벼 한 포기 자라지 않았어도 의무 수행을 요구한다.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흉년이 자주 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액제는 분익제에 비해 소작인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 방법이었지만 전 자본주의 농업 사회에서 보다 일반적인 방식은 분익제였다.

4. '분익제'와 '정액제'의 비교지점과 대립코드는 무엇인가?

→

5. 농업 사회에서 분익제가 일반적인 방식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03]

이러한 상황은 필리핀 정부가 벼 생산 분익농들을 정액 소작농으로 전환시키고자 시도한 루손 지역에서도 관찰되었다. 정부는 소작농들에게 분익제 하에서 부담하던 평균 지대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액제 지대로 제시하였다. 새로운 체제에서 소작인은 대략적으로 이전 연평균 수입의 두 배, 새로운 종자를 채택할 경우는 그 이상의 수입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체제가 제시하는 기대 수입에서의 상당한 이득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은 전환을 꺼렸다.

6. 필리핀 정부의 예시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내용인가?

→

7. 왜 필리핀의 농민들은 정액제로의 전환을 꺼렸는가?

→

## #평가원/수능 적용하기

- 2021. 06 [16~20] 과거제

(가)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

Q, 3번 물음에서 요구했던 태도를 바탕으로 과거제의 핵심을 바탕으로 개방성, 유동성, 익명성에 대한 정보들을 납득해보자.

## [01]

통제되지 않는 자연재해와 지배자의 요구에 시달리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전(前)자본주의 농업사회 농민들에게,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계산의 여지는 거의 없다. 정상적인 농민이라면 큰 벌이는 되지만 모험적인 것을 시도하기 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실패를 피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악조건은 농민들에게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안전 추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성향을 체득하도록 한다. 이러한 '안전 제일의 원칙'을 추구하기 위해, 농민들은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하는 종자의 다양화, 경작지의 분산화, 재배 기술개선 등 생계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술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호혜성, 피지배층이 지배층에 기대하는 관대함, 그리고 토지의 공동체적 소유 및 공동 노동 등 절박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도 필요로 한다.

## 2. [01]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 '안전 제일의 원칙'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게 곧 화제 그 자체예요. 결국 전자본주의 농업 사회의 농민들이 위험회피성향을 가진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깐요. 그럼 이 농민들의 위험회피성향과 관련된 내용이 뒤에서 나올 것이라는 점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2-1. 해당 키워드에 대한 주요 정보는 무엇인가?

→ 신고전주의의 이윤의 극대화와의 비교지점입니다. 결국 이윤의 극대화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안전 제일의 원칙은, 위험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안전 제일의 원칙에 따르면 '생계 안정성'과 같은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의 극대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주된 목적이 다르네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리스크에 대한 태도'라는 비교지점을 기준으로 둘 사이의 대립코드도 찾을 수 있습니다.

## 3. [01:01~01:02]를 읽고 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계산의 여지가 없는지 이해해보자.

### [01:01~01:02]

통제되지 않는 자연재해와 지배자의 요구에 시달리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전(前)자본주의 농업사회 농민들에게,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계산의 여지는 거의 없다. 정상적인 농민이라면 큰 벌이는 되지만 모험적인 것을 시도하기 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실패를 피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 이 두 문장만을 읽고도 '안전'이라는 개념 정도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계산의 여지가 없는 이유가 결국 '실패'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모험적인 것은 항상 실패의 위험성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리스크인 거죠. 그런데 농민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려고 한다네요(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자연재해나 지배자의 요구를 말하는 것이겠죠?). 아무튼 농민들에게는 '이윤의 극대화'보다 위험을 피하는 것, 즉 '안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농민들은 자연재해나 지배자의 요구와 같은 위험 부담을 갖고 생계를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함부로 위험을 감수하면 생계 자체가 거덜나는 거예요. 갑자기 태풍이나 홍수가 닥쳐서 농사를 망치게 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안 보이게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을 감수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실패를 회피하는 방향,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죠.

조금 상식적인 차원에서 설명해볼게요. 우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죠? 이 말을 토대로 농민들의 성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윤의 극대화'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01:02]는 '큰 벌이는 되지만 모험적인 것'이라는 부분이 이윤의 극대화를 피하는 농민들의 성향을 재진술해주는 문장이예요. 그럼 맥락상 이 글에서 말하는 '이윤의 극대화'는 '큰 벌이는 되지만 모험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걸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말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농민들이 리스크를 회피하고 안정적인 것을 원한다는 뜻을 파악하러 조금 수월해지죠?

이 사고과정이 글로 풀어써서 어려운 것이지 막상 문장을 제대로 읽게 되면 5초 정도 생각하고 바로 납득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읽어야 하고 이렇게 읽는 방법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고민해봅시다.

4. [01:03]의 '악조건'을 이해하고 이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보자.

#### [01:03]

이와 같은 악조건은 농민들에게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안전 추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성향을 체득하도록 한다.

→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악조건'은 사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연재해나 지배자의 요구와 같은 위험부담을 안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농민들의 상황은 당연히 힘든 상황이죠? 앞서도 설명했듯 자칫 잘못하면 생계가 위험해지고 가정이 날아가버립니다. 악조건이네요. 여기까지 파악하면 이 문장이, 농민들의 성향에 대한 재진술 문장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두 문장을 읽으면서 열심히 납득했죠? 농민들이 안전을 추구하는 것, 위험을 피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요! 그걸 정리해주는 문장인 겁니다. 실전이라면 이 문장을 읽고 농민들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해주시고, 왜 이윤의 극대화를 피하는지 간단하게라도 납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계가 날아가는 '악조건' 때문에 안전을 추구한다! 이 정도는 실전에서도 파악할 수 있겠죠?

5. [01:04, 01:05]의 정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

[01:04, 01:05]

이러한 '안전 제일의 원칙'을 추구하기 위해, 농민들은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하는 종자의 다양화, 경작지의 분산화, 재배 기술개선 등 생계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술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호혜성, 피지배층이 지배층에 기대하는 관대함, 그리고 토지의 공동체적 소유 및 공동 노동 등 절박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도 필요로 한다.

→ '안전 제일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결국 앞에서 잡았던 신고전주의와의 비교지점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가족의 안전이나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종자의 다양화 경작지 분산화나 재배 기술 개선에 대한 내용을 납득할 수 있어요. 결국 경작지를 분산화하는 건 흉년을 대비한다는 것, 또 재배 기술개선도, 재배 작물을 확보해야하는 것이죠. '생계 안정성'이라고 키워딩도 해줬기 때문에 안전을 중심으로 생각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호혜성', '공동 노동'과 같은 내용도 서로 돕고 사는 것 품앗이 등 서로의 생계를 지키는 연대 정도로 납득 가능하겠어요. '관대함' = 높은 신분의 부호가 생계를 위해 곡식을 베푸는 등 결국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화제를 잡고, 앞에서 잡은 비교지점(대립코드)을 중심으로 읽었다면 전혀 추가 정보라고 생각되지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참, 그리고 안전 제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 두 가지가 기술적 장치와 사회적 장치로 구분된다는 점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안전 제일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으로 두 가지 장치가 있었고 우리는 그 장치들을, 안전 제일의 원칙을 중심으로 이해한 것이예요.

[02]

이러한 원칙과 관련된 소작제도는 두 가지로 나뉜다. 소작인이 지주에게 납부하는 지대의 종류에는 수확량의 절반씩을 나누어 갖는 분익제와 일정액을 지대로 지불하는 정액제가 있다. 분익제에서는 수확이 없으면 소작료를 요구하지 않지만, 정액제에서는 벼 한 포기 자라지 않았어도 의무 수행을 요구한다.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흉년이 자주 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액제는 분익제에 비해 소작인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 방법이었지만 전 자본주의 농업 사회에서 보다 일반적인 방식은 분익제였다.

분익제 [분/익/제]

-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분) 지불하는 '제'도

정액제 [정/액/제]

- '정'해진 '액'수를 지불하는 '제'도

6. '분익제'와 '정액제'의 비교지점과 대립코드는 무엇인가?

→ 지불 방식의 차이입니다. 분/익/제는 말 그대로 수익을 분할해서 내는 것이고, 정/액/제는 정해진 금액을 일정하게 내는 것이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지불 금액의 변동성'이라는 비교지점을 기준으로 둘의 대립코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분익제는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유동적입니다. 수확량의 절반을 내야하니까 수확량에 따라서 얼마를 낼 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반면 정액제는? 항상 일정 금액을 내야 합니다. 수확량이 적든 많은 똑같은 것이죠. 지불 방식, 지불 금액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셨다면 잘 읽으신 겁니다!

7. 농업 사회에서 분익제가 일반적인 방식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결국은 안정성이겠죠? 정액제를 택한다면 흉년일 때 지불해야 할 일정 금액이 고정입니다. 그런데 흉년으로 인해 지불해야 할 그 금액이 수확량의 대부분이라면 생존의 위협 가능성이 있겠어요. 반면 분익제는 수확량의 n%(지문에서는 50%)를 지불 방식이기 때문에 흉년에도, 풍년에도 일정 비율의 소득이 보장되며, 흉년일 때 지불해야 할 소작료가 적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혹은 정액제가 이윤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고전주의 경제학과의 비교지점을 바탕으로도 이해할 수 있기도 해요. 지불 금액이 일정하니까 수확량이 많다면 농부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도 분익제에 비해 늘어날 겁니다. 이 내용과도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03]

이러한 상황은 필리핀 정부가 벼 생산 분익농들을 정액소작농으로 전환시키고자 시도한 루손 지역에서도 관찰되었다. 정부는 소작농들에게 분익제 하에서 부담하던 평균 지대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액제 지대로 제시하였다. 새로운 체제에서 소작인은 대략적으로 이전 연평균 수입의 두 배, 새로운 종자를 채택할 경우는 그 이상의 수입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체제가 제시하는 기대 수입에서의 상당한 이득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은 전환을 꺼렸다.

8. 필리핀 정부의 예시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내용인가?

→ 안정성 문제입니다! 분익제, 정액제가 그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에 대한 예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안전 제일의 원칙을 바탕으로 농민들이 분익제를 선호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9. 왜 필리핀의 농민들은 정액제로의 전환을 꺼렸는가?

→ 앞에서 언급했죠? 결국은 안정성 문제라고 봐야겠어요. 농업 사회에서는 이윤의 극대화보다 안정성 보장이 중요합니다! 이윤은 앞에서 계속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죠? 설명도 계속 했어요.

**\*2021. 06 [16~20] 과거제**

(가)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

**Q, 3번 물음에서 요구했던 태도를 바탕으로 과거제의 핵심을 바탕으로 개방성, 유동성, 익명성에 대한 정보들을 납득해보자.**

→ 과거제에 대해 설명하는데, 다양한 속성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일단 핵심은 '합리성'입니다.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뽑는다는 것이죠? 시험 성적만 보고 뽑으니 능력주의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뜻이네요. 이 정도는 1문단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읽어 보면 과거제의 다른 특징들인 공정성(익명성)도, 개방성도 전부 과거제의 합리성과 연결되는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합리성(능력주의적 시험)이라는 과거제의 핵심에 대한 특징들이니까요. 과거제의 특징에 대해 합리성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뽑는기 때문에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이게 개방성까지 제고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은 곧 시험 성적이었죠? 시험 점수만 보고 뽑으니 공정하고, 개방성도 증대되는 것이네요. 신분이나 세습적 군력 등에 따라 관료를 뽑는 게 아니라 오로지 '시험 성적'이라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뽑습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에 따라 뽑는 건 합리성의 내용이었죠?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서 관료를 선발하는 것! 결국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익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성적만 보고, 능력만 보고 뽑으니 당연히 익명성이라는 정보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잘나가는 양반가 자제도, 옆집 길동이에 자식도 전부 똑같은 시험을 치고 오로지 점수에 따라서만 선발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국 익명성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시험 점수만 보고 뽑는다는 과거제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네요.

### #저자의 한줄평

→ 핵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납득하면서 읽기.